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1차 확정

전주·군산·익산 포함
10개 선거구 총 36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 이하 공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자 경선 국면에 들어갔다.

공관위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총 36명의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재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공관위원이 참석해 심사 기준과 절차, 향후 경선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심사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에 기반해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은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당시 상황과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부정과 비리, 금권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클린공천과 낙하산 공천 배제를 통해 시스템 공천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정체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평가 등 6개 항목(100점 만점)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적합도 조사 결과를 종합 반영했다.

100점 만점 중 도덕성 항목은 15점 비중으로 반영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1차 심사 후보자 명단

- ▲전주시 - 국주영은, 우범기, 조지훈
- ▲군산시 -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식, 진희완, 최관규
- ▲익산시 - 심보균, 조용식, 최정호
- ▲진안군 - 동창옥, 이우규, 전춘성, 한수용
- ▲무주군 - 윤정훈, 황인홍
- ▲정수군 - 양성빈, 최훈식
- ▲임실군 - 김병아, 김진영, 신대웅, 성준후, 한득수, 한병락
- ▲순창군 - 임종철, 최영일
- ▲고창군 - 심덕섭, 조민규
- ▲부안군 - 권익현, 김양원, 김정기, 박병래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와 임실군은 각각 8명과 6명의 후보가 몰리며 다자 구도가 형성됐고, 진안군과 부안군은 각각 4명, 전주시와 익산시는 각각 3명으로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

무주·정수·순창·고창군은 각각 2명씩 후보가 확정돼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1차 심사 후보자 명단 참조

경선 방식은 후보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군산시와 임실군은 예비경선을 통해 상위 4명을 선발하며,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이 적용된다.

전주시, 익산시, 진안군, 부안군 등 3인 이상 지역은 분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간 결선을 실시하며,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2인 지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최

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공관위는 합동 연설회를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심사 기준과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기사는 "과거 선거에서는 통과했던 인사가 이번에는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 이재운 위원장은 "심사 기준은 사회적 요구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이 강화된 점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사는 지역별 정치 환경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묻자 "특정 지역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중앙당 기준에 따라 일관된 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면접 과정에서 지역 이해도와 정책 역량 등은 반영했다"고 답했다.

인근 전남과 비교하며 전북의 감각이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개됐고 결과 역시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보했다"며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천 대상 후보자가 공관위 인사와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재운 위원장은 공관위원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정음, 남원, 김제, 완주 등 4개 선거구는 현재 재심과 적합도 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공관위는 "추가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이재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9.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원택, 전북도 12·3 영상 증거 제시 공세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영상 공개... 공식 사과·책임 추궁 촉구

김관영 지사의 12.31년 방조 의혹과 관련, 서류와 기록이 사실인가 아니면 말이 우선인가를 놓고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당시 전북도 안전을 책임진 안전실장의 동영상 증거가 제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와 행안부에 제출한 서류와 기록을 단순한 착오나 실무자 실수란 이유로 적극 부인해오던 전북도의 해명과는 달리 이번 안전실장의 동영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도지사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화 수행' 및 '허위 해명'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식 사과와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내란방조 행위는 사실로 확정됐으며 그동안의 해명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원은 이날 2024년 12월 4일 당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도민안전실장은 브리핑에서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주재 긴급 실무장 회의를 했다"고 밝히며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그동안 김 지사가 '실무자의 실수' 혹은 '기계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해온 내용은 명백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한 거짓이다"며 "전북도의 비상근무 발령과 계엄 매뉴얼에 따른 인력·물적 지원 준비는 김 지사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진 내란 부화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김 지사가 지휘한 행위를 '실무자의 실수'나 '기계적 대응'으로 포장하고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라고 속인 것은 책임 회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계엄 매뉴얼에 따른 행정 지원과 비상근무의 실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가 당시 도정의 수장으로서 위헌적 계엄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응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도민안전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전북도는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가 된다는 인식하에 계엄군의 요구사항과 인력·물적 지원을 지원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것이 내란 부화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질타했다.

따라서 그는 비상근무 발령이 도민의 생명 보호가 아닌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김 지사의 지휘 아래 전북도정이 위법한 계엄 권력에 즉각 부여할 태세를 갖췄던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김 지사가 위헌적 계엄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해명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추후 제기될 법적 문제도 정조준했다.

그는 "김 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비상근무의 목적을 '민주주의 수호'로 둔갑시키고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라고 속인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김 지사가 지휘한 행위를 '실무자의 실수'나 '기계적 대응'으로 포장하고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라고 속인 것은 책임 회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과 민주당 공관위원까지 속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도, 군산·부안서 '마을어장 시험어업' 2차년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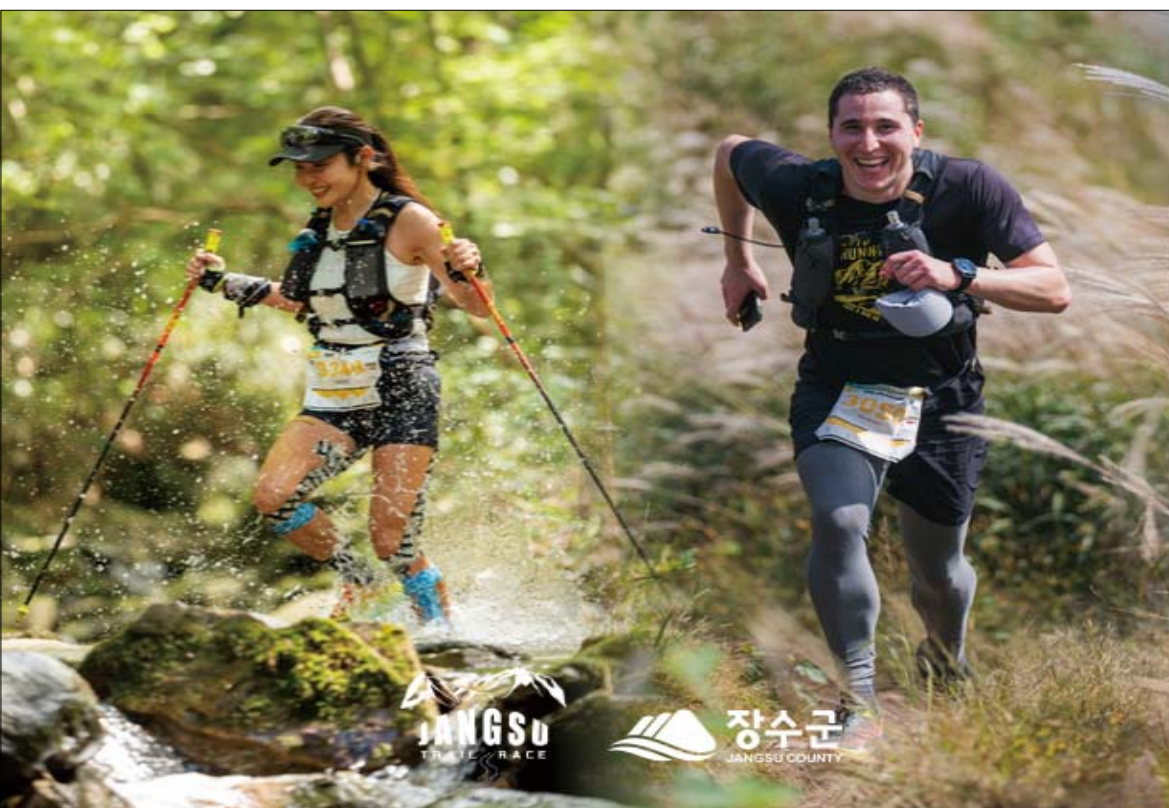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어업잠수사 활용 마을어장 시험어업 결과, 생산량 240톤, 순수익 11억원, 어업이익률 62.2%를 기록하는 등 현장성과 경제성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러한 1차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로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마을어장 포획·채취 방법 개발 시험어업'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제도화와 현장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스낵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마을어장

에서 해삼·전복 등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포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은 군산·부안 해역 115건, 1,557ha 규모로 실시된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한계를 넘어
장수군에서!

JANGSU TRAIL RACE

70K 38K-J 38K-P 20K 5K 4K-VT

JANGSU TRAIL RACE
장수군 JANGSU COUNTY